

현금성 복지, 경기도의 고민은?

목차

- I. 현금성 복지의 의미와 증가원인
- II. 경기도 현금성 복지사업의 특징
- III. 현금성 복지, 앞으로의 방향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정부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우려 제기

- ▶ '17~'21년 5년간 전국 지방정부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는 자체재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40%가 증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 현금성 복지의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 차지

- ▶ '21년 기준 경기도 현금성 복지사업(국고보조사업 포함)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77.39%로 매우 높은 수준
 - 노인에 대한 현금성 급여가 높은 수준(21.06%)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기타취약계층지원 예산 비중 또한 일시적으로 높은 수준(18.95%)
- ▶ 그러나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의 96.01%는 국고보조사업이며, 경기도 자체사업 예산비중은 3.99%에 불과
 - 경기도 자체재원 기준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은 총 43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예산규모 또한 사회복지예산 대비 3.09%, 현금성 예산대비 3.99%에 불과
 - 이중 경기도의 직접사업(순수광역)은 17개 사업(16.83%)이며, 예산비중은 전체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의 1.67%에 불과
 - 광역보조사업(지원)은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며(사업에 따라 도비 보조비율은 다름), 순수광역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적은 수준

현금급여 및 다양한 정책수단의 혼용이 정책효과성을 향상

- ▶ 포괄적 사회정책의 발전과 사회정책의 구상을 위해 ①거버넌스, ②종합 모니터링 체계, ③대상자 선정기준 단순화 등을 적극 고려
 - 급여제공방식의 선택에 있어서는 수급대상자의 관점, 관리효율화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
 - 이를 통해 경기도 사회보장 확충에서 현금과 현물(서비스)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혼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



현금성 복지에 대한 학술적 합의는 없으나, 서비스와 바우처(현물포함)를 제외한 영역으로 정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 '17~'21년 5년간 전국 지방정부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는 자체재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40%가 증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음
 - 전성만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¹⁾, 지난 5년간 전체 지방정부의 집행규모는 약 11% 증가한데 비하여, 현금성 복지지출은 연평균 40%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광역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는 연평균 52%가 증가하여, 기초(시)-36%, 기초(군)-29%, 기초(구)-3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현금성 복지사업의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현금성 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

현금성 복지는 학계에서 현금복지, 현금수당, 현금성 지출 등 다양한 용어로 활용

- ▶ '현금복지(cash welfare)'라는 표현은 학술적으로 연구되어 온 용어는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급여형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규정²⁾
 - 사회보험은 공적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현금복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부조는 현금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현물급여 및 고용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정책수단의 한가지로 현금지원(cash transfer)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³⁾
 - 재화 및 서비스(바우처) 형태의 현물급여와 대비되며,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소비를 통한 효용의 극대화를 도모
 - 현금성 복지사업으로서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은 자산조사를 통하지 않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현금성 복지의 한 분류로 볼 수 있음
 - 또한 지역화폐로의 지급은 용처 제한이 없기에 현금성 복지로 볼 수 있으나, 일정 금액을 카드에 적립하여 지급하는 경우 전자바우처로 현물급여로 볼 수 있음

현금성 복지사업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

- ▶ OECD SOCX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금(cash)과 현물(in-kind)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물에는 서비스와 주거지원 등 물품이 포함됨⁴⁾
- ▶ 전성만 외(2022) 연구에서도 복지지출을 크게 ①현금성, ②바우처, ③현물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직원수당/근속수당/운영수당 등은 현금성 복지지출에서 제외

1) 전성만·김진·유자영(2022).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 2017-2021년 세부 사업별 지출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3), 37-61.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 Lynch, J., Meunier, A., Pilkington, R., & Schurer, S. (2019). Baby Bonuses and Early-Life Health Outcomes: Using Regression Discontinuity to Evaluate the Causal Impact of an Unconditional Cash Transfer.

4) 윤성원·양재진. (2019). "한국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에 자체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가?: 2017년 지방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초연구". 『사회과학논집』, 50(2), 117-140.

I. 현금성 복지의 의미와 증가원인

현금성 복지사업은
이웃효과(동형화),
지역자원, 복지수요에
영향을 받음

- 지방행정연구원(2022)의 연구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주요 현금성 복지지출은 아래 단위사업과 같이 구분

〈표 1〉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 추정방법(단위사업명 내 검색어 예시)

성격	단위사업 키워드(예시)
현금성	수당, 축하, 장려, 지원, 코로나,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생계, 통장, 계좌, 의료비, 입학준비금, 기초보장, 자녀 교육비, 양육비, 난방비, 진단비, 피복비, 교통비, 부식비, 양육보조금, 치료비, 정착금 등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서비스 등
현물	양곡 등

자료: 전성만 · 김진 · 유자영(2022). p.44.

- 종합하여 보면 현금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의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현금복지=현금급여(지원)=현금성수당’ 등이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음
- 현금성 복지사업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현금(cash)이 기준이 되며, 서비스 이용권(바우처)과 현물은 제외

▶ 우리나라 226개 기초정부의 자체복지사업을 재분류하여 분석한 최정은 외(2020)의 연구에⁵⁾ 따르면 지방정부의 현금복지는 크게 ①이웃효과(동형화), ②정치적 환경, ③지역자원, ④복지수요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근지역의 제도효과인 동형화 효과와 함께 복지수요적 요인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지역별 복지수준의 차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감도가 높은 수준⁶⁾이기에, 인근지역의 현금성 복지지출의 증가는 기초정부의 현금복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복지수요적 측면에서 고령화율, 출산율 등은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초수급자비율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정치적 효과(정치이념, 당선득표율, 정당교체)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포퓰리즘에 의한 현금성 복지사업의 확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물론 인접지역(또는 동일지역)의 현금성 복지공약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정치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음

▶ 복지국가 초기에는 현금성 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발전하였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현물급여 또한 복지제도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발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물급여에 비해 현금급여가 대상자 만족도, 경제적 영향, 빈곤 감소 효과 등에서 다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⁷⁾,
- OECD 국가에서 현물급여 제공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어떤 급여형태가 우수하다고 판정하기에는 한계 존재

5) 최정은·최영준·김나리(2020). “기초지방자치단체 현금복지 수준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한국행정논집』, 32(2), 269-299.

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2019).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자료집.

7) 김태완·김문길·윤상용·송치호·김성아·이주미(2013).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일반적으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와 달리 급여의 수급 후 다시 이전 또는 매매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며, 욕구에 기초하여 대상을 정확하게 targeting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⁸⁾
 - 임형빈·김홍배(2016)는⁹⁾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의 지역별 복지효과는 긍정적이며, 특히 주택바우처 제도가 높은 효과를 보임
 - 이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경우 주택 임대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¹⁰⁾
 -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한 이영광·지은구(2015) 연구에¹¹⁾ 따르면 현금급여에 비해 바우처 제도가 장애아동 부모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현물 또는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현금급여의 장점 중 하나인 소비자 선택적 요소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¹²⁾
- ▶ 이러한 현물급여(바우처 포함)의 장점에도, 현금수당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확인되고 있음¹³⁾
 - 이철희·이소영(2022)에 따르면 과거 15년간 여러 지방정부에서 시행한 현금지원은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
 - 현금성 복지의 대표적인 사회수당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음
- ▶ 학자들에 따라 급여형태 선택의 근거는 다르며, 대표적으로 Gilbert & Terrell(2007)의 경우¹⁴⁾ 효과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Currie & Gahvari(2007)의 경우¹⁵⁾ 형평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음
 -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 공통적인 현금과 현물급여의 강·약점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8) 이현주·김진·John Hudson·Stefan Kühner·전지현(2018).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임형빈·김홍배(2016).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지역별 효과분석-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137-150.
 10) 박은철·오근상.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151.
 11) 이영광·지은구(2015). “현금급여와 바우처에 대한 장애아동 부모 만족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86-711.
 12) 남찬섭(2008).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바우처 사업의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6), 7-45.
 13) 이철희·이소영(2022).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거”. 『경제학연구』, 70(2), 61-93.
 14) Gilbert, N., & Terrell, P. (2007). 사회복지정책론-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남찬섭, 유태균 역. 서울: 나눔의 집.(원본발간일 1998년).
 15) Currie, J., & Gahvari, F. (2008). Transfers in cash and in-kind: Theory meets the dat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2), 333-383.

〈표 2〉 급여 형태의 특징 비교

비교기준		급여형태	
비교범주	비교내용	현금	현물(서비스)
기초육구 충족과 사회적 가치실현	- 기부장주의 정확한 표적화 또는 자가 표적화(self-targeting)/대상 효율성 - 기초육구의 보장, 인적 자원을 위한 투자, 공동체 가치구현 등	- 다른 용도로의 사용가능성이 높아 목표효율성이 낮으며 사건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아 대상 효율성도 다소 낮음 - 개인 선택을 강조하여 공동체 가치 구현에 상대적으로 열위	- 욕구를 전제로 하는 표적화로 표적화에서 우위 - 집합주의적 가치, 사회 연대적 접근이 강하며 가치재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공동체의 가치구현에 긍정적 - 남용이나 오용의 가능성 적음
	- 노동동기의 왜곡	- 노동 동기의 왜곡 위험이 상대적으로 강함	- 노동 동기의 왜곡 위험이 상대적으로 약함
	- 소비자주권보장(기호의 반영) - 정보 불완전성/정보 비대칭성의 대응가능성	- 기호의 반영이 가능함 - 의료서비스 등 가치재구입에서는 정보불완전성 등에 대한 대응이 불안전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호의 반영이 어려움 - 정보비대칭성, 정보불완전성에 대한 대응이 서비스 질 관리 등으로 일부 가능
관리 비용과 기타	- 낙인	- 거의 없음	-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 높음
	- 운영의 효율성 - 규모의 경제 - 관리비용	- 관리비용 적음 - 효율적임	- 관리비용 필요 - 규모의 경제 있을 수 있음
	- 정치적 선호 - 납세자의 저항	- 납세자의 저항이 강하고 정치적으로 선호되기 어려움	- 납세자의 저항이 낮을 수 있음

자료: 이현주·김진·John Hudson·Stefan Kühner·전지현(2018:32)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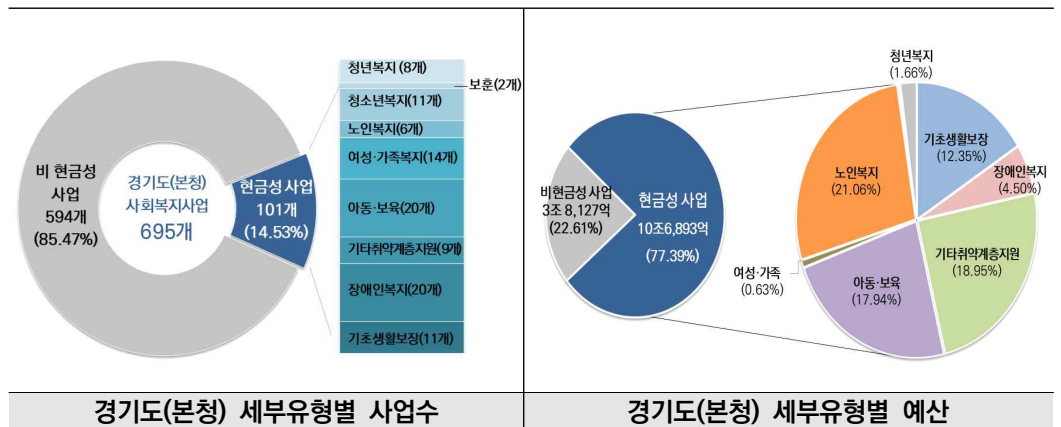
- ▶ 종합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발전형태 및 양상에 따라 어떠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 이는 단순히 현금성 급여가 서비스제공 등과 같은 현물급여에 비해 좋다/나쁘다, 옳다/그르다의 차원이 아닌 정책의 목표, 대상, 사회경제적 환경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급여제공방식의 선택에 있어서는 수급대상자의 관점, 관리효율화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함

II. 경기도 현금성 복지사업의 특징

경기도(본청)의 현금성 복지사업은 총 101개이며, 사회복지예산의 77.39%를 차지

- ▶ 경기도 본청의 현금성 복지사업은 전체 사회복지사업 대비 사업수(101개, 14.53%)는 낮은 수준이나, 예산규모는 77.39%로 매우 높은 수준¹⁶⁾
 - 지방재정 365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결산이 완료된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
 - 지방재정 365의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자료 중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반환금, 예치금, 예비비 등 실제 사업예산이 아닌 항목들을 제외하고 중복사업명은 하나로 분석
 - 세부부문별로는 노인에 대한 현금성 급여가 가장 높은 비중(21.06%)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상생국민지원금(18.95%)이 높은 비중임
 - 단, 상생국민지원금은 일시적(한시적) 지출로서 향후 소멸될 예산으로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아동·보육 부문이 1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11.54%를 차지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의료급여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관리

〈그림 1〉 경기도(본청) 세부유형별 사업 수 및 예산



자료: 지방재정 365, 자치단체 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21.12.31.기준)에서 재계산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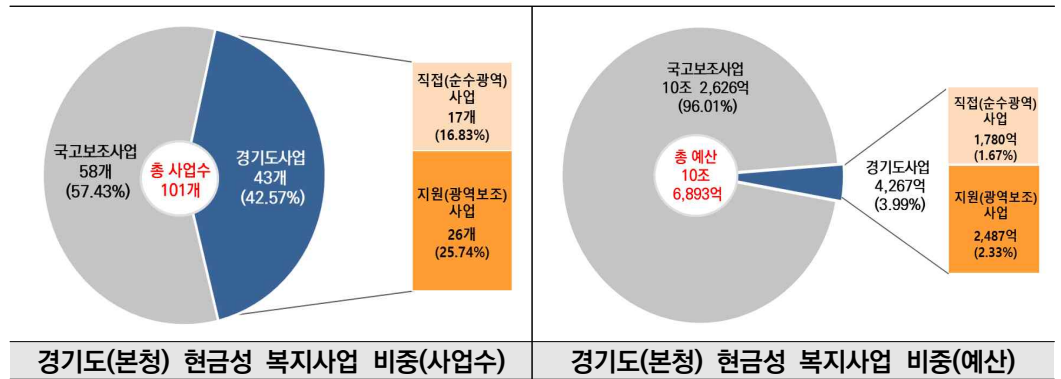
- ▶ 이를 자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예산을 기준으로 경기도 현금성 복지사업의 96.01%는 국고보조사업이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순수광역, 광역보조) 사업은 3.99%에 불과
 - 단순히 사업수만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은 현금성 복지사업에서 57.43%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 기준으로는 96.01%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사업수와 예산대비 비중의 차이는 지방정부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이 소규모 예산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16) 지방재정 365, <http://lofin.mois.go.kr>.

II. 경기도 현금성 복지사업의 특징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의 96.01%는 국고보조사업, 경기도 자체사업은 3.99%에 불과

〈그림 2〉 경기도(본청) 현금성 복지사업 비중(사회복지분야 대비)



자료: 지방재정 365. 자치단체 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21.12.31.기준)에서 재계산 및 재구성

- ▶ 경기도 사회복지분야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은 총 43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예산 대비 3.09%, 현금성 예산대비 3.99%에 불과
 - 경기도 본청의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은 총 43개이며, 전체 사회복지사업 대비 사업수는 6.19%, 예산 대비 3.09%에 불과
 - 이중 경기도의 직접사업(순수광역)은 17개 사업(16.83%)이며, 예산비중은 전체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의 1.67%에 불과
 - 광역보조사업(지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며(사업에 따라 도비 보조비율은 다름), 순수광역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이지만 매우 적은 수준

〈그림 3〉 경기도(본청) 현금성 복지사업 세부유형별 총액 및 사업 수



자료: 지방재정 365. 자치단체 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21.12.31.기준)에서 재계산 및 재구성

- ▶ 경기도의 현금성 복지지출의 규모는 전체 자체재원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 평균인 2.6%에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경기도 자체재원을 기준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의 예산비중은 2.11% 수준이며, 전체 현금성 복지사업 규모를 추정하면 약 3% 수준으로 추정됨(경기도의 자체 재원 규모 및 광역정부 사회복지부문 현금성 복지사업 규모 비율을 활용하여 추정)
 - 전국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사업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¹⁷⁾ 경기도가 타 지방정부에 비해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17) 전성만·김진·유자영(2022).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 2017-2021년 세부 사업별 지출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3), 37-61.

II. 경기도 현금성 복지사업의 특징

- 기초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분석한 최정은 외(2020)¹⁸⁾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기초정부의 평균 현금성 복지사업의 예산비중은 5.4%이며, 경기도는 5.8% 수준

〈표 3〉 경기도(본청) 세부부문별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비중

(단위: 백만 원, %)

지원유형	사업명	예산	비중	
			사회복지예산 대비	현금성 복지사업 대비
기초생활보장	경기도형 긴급복지(자체/지원)	5,528	0.04	0.05
	교육급여(자체/직접)	943	0.01	0.01
장애인복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자체/지원)	1,974	0.01	0.02
	도비 장애수당(자체/지원)	3,111	0.02	0.03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자체/지원)	324	0.00	0.0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자체/지원)	158	0.00	0.00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자체/지원)	2,470	0.02	0.0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자체/지원)	132	0.00	0.00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자체/지원)	36	0.00	0.00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자체/지원)	10,637	0.08	0.10
기타취약계층 지원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자체/직접)	575	0.00	0.0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자체/직접)	400	0.00	0.00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자체/직접)	7,000	0.05	0.07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자체/직접)	50,000	0.36	0.47
	노숙인 자활지원(자체/직접)	75	0.00	0.00
	노숙인 자활지원(자체/지원)	505	0.00	0.00
아동·보육	저소득 아동지원(자체/직접)	5	0.00	0.00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자체/지원)	26,200	0.19	0.25
	입양축하금 지원(자체/지원)	41	0.00	0.00
	결식아동 급식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자체/지원)	22,090	0.16	0.21
	결식아동급식지원(자체/지원)	25,184	0.18	0.24
	저소득 아동지원(자체/지원)	2,443	0.02	0.02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자체/지원)	23	0.00	0.00
여성·가족복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자체/직접)	3,900	0.03	0.04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자체/지원)	16	0.00	0.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자체/지원)	119	0.00	0.00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자체/지원)	20	0.00	0.00
노인복지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자체/지원)	5,523	0.04	0.05
	폐지줍는 노인 지원(자체/지원)	210	0.00	0.00
청소년복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자체/지원)	2,298	0.02	0.02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자체/지원)	4,888	0.04	0.05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자체/직접)	3,395	0.02	0.03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자체/직접)	117	0.00	0.00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자체/직접)	4	0.00	0.00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자체/지원)	1,135	0.01	0.01
보훈	보훈대상자 지원(자체/직접)	789	0.01	0.01
	보훈대상자 지원(자체/지원)	23,273	0.17	0.22
청년복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자체/직접)	1,887	0.01	0.02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자체/직접)	10,350	0.07	0.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자체/지원)	110,411	0.80	1.03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자체/직접)	3,206	0.02	0.0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자체/직접)	64,749	0.47	0.61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자체/직접)	30,595	0.22	0.29

자료: 지방재정365. 자치단체 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21.12.31.기준)에서 재계산 및 재구성

18) 최정은·최영준 김나리(2020). "기초지방자치단체 현금복지 수준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한국행정논집』, 32(2), 269-299.

III. 현금성 복지, 앞으로의 방향

한정된 예산에서 다양한 급여형태를 혼용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

- ▶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1월 진행된 2023년 부처 업무계획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금성 복지지출에 대한 직·간접적 비판을 통해 향후 축소의 방향을 시사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현금성 복지 분석을 통해 절감시 인센티브 지급, 과다 지출시 패널티 부여 등의 계획을 보고하였고,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보고에서는 적절한 자기부담과 함께 사회서비스로 제공해야 함을 지시
 - 분석 결과 현금성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것이며, 자체 재원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는 경기도의 재정력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한정된 예산에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성 복지와 함께 다양한 제도를 혼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채정(2020)의 연구에 따르면¹⁹⁾, 맞벌이 여부, 자녀연령, 소득분위, 거주지역 등의 가구적 특성에 따라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정책수단별 효과의 차이 존재
 - 이는 서비스지원, 현금급여, 조세혜택 등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
 -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할 때 현금과 현물지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상적인 답은 없으며(이현주 외, 2018:182)²⁰⁾, 인구학적 구성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영역별/대상자별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이현주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²¹⁾ 기초육구 영역의 서비스 보장이 일정수준 이상 보장될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현물급여(서비스지원)를 소득보장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특히 의료, 주거, 교육과 같은 영역)
- ▶ 현금과 현물급여의 선택은 포괄적 사회정책의 발전과 사회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중요하며, 이를 위해 ①거버넌스, ②종합 모니터링 체계, ③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단순화 등을 적극 고려해야함
 - 정책수단의 선택은 결국 사회정책의 종합적 기획과 평가 속에서 향후 발전방안을 구상할 때 중요한 것이며, 종합적 발전방안의 구상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
 - 사회정책의 기획은 정책영역별로 종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대표적 지표의 개발과 모니터링 기제를 마련해야 함
 - 또한 현재의 대상자 선정기준 등 복잡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도민들의 복지체감도 증진과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높음
 - 이를 통해 경기도 사회보장 확충에서 현금과 현물(서비스)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혼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19) 이채정(2020).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20.09, 281-299.
 20) 이현주·김진·John Hudson·Stefan Kühner·전지현(2018).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 이현주·장지연·전병유(2017). “현금 기본소득과 현물 공적서비스의 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56(1), 93-118.